

<전북도-도의회 문화재단 설립 '이견'>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문화재단(가칭)'의 설립을 놓고 전북도와 도의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에 민간 주도의 '전북문화재단'을 설립해 문화정책 수립과 문예진흥기금 운용, 문화시설 운영, 문화예술단체 지원, 문화예술 교육사업 등의 업무를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설립에 필요한 200억원 중 180억원을 이미 확보했으며 내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전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도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지사 혹은 민간인이 이사장을 맡는 문화재단을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 출범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을 위해 도가 200억원의 기금을 부담하고 이사장도 도지사가 맡을 가능성도 있어 사실상 민간주도라는 명분이 퇴색,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도가 재원의 대부분을 책임지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보다는 도의 정치적·행정적 논리에 따라 문화재단의 정책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화재단은 또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과 '전북 도립국악원',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등 기존 문화관련 단체들을 통합, 흡수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벌써 관련 기관들의 반발은 사는 등 자율성 침해 논란도 재점화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재 예총 산하의 연극과 영화, 무용 등 분야별로 자연스럽게 운영되고 있는 문화단체 및 기구들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할 가능성도 커 결국 문화재단이 '옥상옥'의 기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 관계자는 "민간 주도의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효율성 확보는 물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도민에게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도의원들은 "재단을 설립해 문화정책을 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문화예술의 다양한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특히 문화관련 단체들을 통폐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9-09-27 13:49 송고]